
주요업무보고

2022. 4.

시장비서실

I. 일반 현황

1 주요 기능

- **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 및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**
 - 시장 공약사업 등 시정 핵심과제 수립 및 추진 지원
- **민생현장 중심 시장 일정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**
 - 민생문제 및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등 시민 중심 일정 수립·추진
 - 시정 이해도 제고 및 성과 홍보를 위한 메시지 지원
- **시의회 및 국내·외 기관 소통·협력 가교 역할**
 - 시의회, 중앙정부, 타 지방자치단체,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소통·협력 확대

2 인력 현황 (기준 / 단위 : '22.3.31. / 명)

구분	총계	일 반 직						별 정 직				
		소계	3급	5급	6급	7급	8·9급	소계	4급상당	5급상당	6급상당	7~9급상당
정원	34	9	1	2	3	2	1	25	3	18	4	-
현원	33	13	1	4	2	6	-	20	3	10	4	3

※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전문임기제 3명(정책수석, 정무수석, 민생특보) 별도

3 예산 집행현황 (기준 / 단위 : '22.3월말 / 천원)

● 과목별 집행현황

구 분	예 산 액	집 행 액	잔 액	비 고
계	341,200	60,667 (17.8%)	280,533	
기관운영업무추진비	277,200	49,096 (17.7%)	228,104	조직운영, 대민활동, 유관기관협조, 직책수행 등 제반 경비
시책추진업무추진비	64,000	11,571 (18.1%)	52,429	주요행사, 시책사업,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

Ⅱ. 주요 업무

①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

②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

③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 추진

④ 시의회와 「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」

1

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

전 세계에서 대유행(Pandemic) 중인 코로나19의 서울 내 확산 방지 및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서울시 대응현황 보고

□ 추진개요

- 최근 오미크론 변이 증가 및 급격한 확산 위기에 직면하여, 오미크론 대유행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방역·의료대응 추진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1. 맞춤형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감염예방 지속

- 감염 확산 억제 및 중증 예방을 위한 3차 접종 80% 조기완료 추진
【 백신접종 현황('22.3.23. 0시 기준) 】

(단위: 명)

대상자	누계	3.22	3.21	3.20	3.19	3.18	3.17	3.16이전	
9,401,888*	1차	8,316,319 (88.5%)	302	415	5	356	807	459	8,313,975
	2차	8,230,867 (87.5%)	208	362	4	324	917	519	8,228,533
	3차	5,850,029 (62.2%)	5,003	8,570	108	5,192	13,602	8,497	5,809,057
	4차	25,760 (0.3%)	975	1,037	3	343	2,004	1,186	20,212

* 2021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(거주자) 기준(주민등록말소자, 재외국민 제외)

○ 대상별 맞춤형 예방접종 확대 추진

- (고위험군) 요양(정신)병원·노인(정신)요양시설 입원·종사자, 면역저하자 등 3차 접종 완료 3개월 경과자(33만명) 대상 4차 접종 추진(2.14.~)
- (청소년) 접종 완료 3개월 경과한 12~17세 청소년 3차 접종 추진(3.14.~)
- (소아) 만5세~11세 소아(54만명) 대상, 코로나19 백신(소아용 화이자) 지정 위탁의료기관(185개소) 접종 추진(3.31.~)

○ 「市 소액 피해보상 전문심의위원회」 운영 및 이상반응 신속 모니터링

-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(30만원 미만)은 市에서 신속 집행
- 보건소 이상반응 신속 모니터링 「AI 백신 케어콜 서비스」 시행

2.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및 고위험군 중심 선별 조사 추진

-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및 환자분류 등 절차 간소화
 - 확진자 진술 기반 자기기입식 역학조사* 등 조사방식 효율화
 - * 확진자 본인 '자기기입 → 보건소 검토·승인 → 시스템 자동등록 이관'으로 조사절차 간소화
 - 감염취약시설 3종** 등 고위험군 우선관리,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
 - ** ① 장기요양기관(요양병원, 요양원, 주간보호센터), ② 정신건강시설, ③ 장애인시설
- 시설 방역관리자 역할 강화로 시민 참여형 자율방역 시행
 - (감염취약시설 3종) 시설 방역관리자 先 조치 후 역학조사관 현장조사 확인
 - (기타 일반시설) 시설 방역관리자가 자체 조사 및 방역추진
 - (협업체계 구축) 유행상황 대비, 시설 - 區 보건소 - 市 간 핫라인 구축
 - ▶ '시설별 코로나19 대응 매뉴얼' 8종(요양병원, 직장, 학교, 종교시설 등) 제작 지원
 - ▶ '집단발생시 현장대응 및 코호트격리 등 단계별 조치사항' 2종(병원, 요양시설 등) 제작 지원

3.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및 병·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

-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충으로 의원 중심 진료체계 구축 및 효율적 운영
 - (집중 관리의료기관) 215개소(병원급 79, 의원급 136) 지정·운영 중
 - (일반관리군 대상 병·의원) 전화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위해 1,967개소
(전체 의료기관의 21%) 참여 중
 - (의료상담센터) 의료상담, 의약품 처방, 입원요청 등 응급대응을 위해 6개소
(시립 5, 민간 1 - 中 소아전용 2개소) 운영 중
 - ▶ 운영실적(2.9.~3.10.) : 65,636건(상담 19,149, 처방 27,029, 전원요청 959, 기타 18,499)
- 재택치료키트 공급 및 치료제 적기 투약으로 환자 중증화 예방
 - 65세 이상 성인용(산소포화도측정기 등 5종), 12세 미만 소아용 (체온계 등 4종) 등 재택치료키트 291,751개 지급
 - 팍스로비드 조제 및 전달 약국 89개소 지정·운영으로 60세 이상, 면역저하자, 40~50대 기저질환자 증상발현 5일 이내 치료제 투약

4. 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 및 운영 효율화 강화

- 병상 확충 목표 달성으로 환자 적시 입원 및 치료체계 구축
 - (확충목표) 5,139병상(중증·준중증 1,154, 중등증 3,985, 1.1.기준)
 - (확충실적) 6,159병상(생치 5,395 별도, 3.23.기준), 목표 대비 약 120% 달성
 - ▶ 행정명령 915병상(100% 달성) + 시 자체 확충노력 5,244병상 확보
 - (추가확보) 市 생활치료센터 1개소 286병상 추가 확보(3월 말)
 - ※ 3.23.기준 병상가동률 : 52.8%(중증 64.1%, 준중증 69.5%, 중등증 48.8%)
- 코로나19 병상 운영 효율화·중환자 병상확보 등 의료대응 강화
 - (재원관리) 병상 입원일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및 미준수자 전원 권유
 - ▶ 격리 해제일 초과 입원 시 병상 시스템상 '적색' 표시로 전원·전실 유도
 - (거점생치) 경증자·기저질환자 거점생치 우선배정으로 중증 병상여력 확보
 - ▶ 입원대상자 中 암·고혈압 등 기저질환 있는 경증 확진자 거점생치로 배정
 - (체계전환) 코로나19 환자 일반병상 치료체계 전환(3.8.~) 정착 지원
 - ▶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체계가 전환됨

5. 민생경제 활성화와 방역 조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

-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 조치 3.21. ~ 4.3.
 - (사적모임)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확대
 - (시간제한) 1·2·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3시까지 제한
 - ▶ 1그룹: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리텍·무도장)
 - ▶ 2그룹(4종): ① 식당·카페, ② 노래연습장, ③ 목욕장업, ④ 실내체육시설
 - ▶ 3그룹·기타(8종): ① 평생직업교육학원, ② PC방, ③ 오락실 ④멀티방, ⑤ 카지노, ⑥ 파티룸, ⑦ 마사지·안마소 ⑧ 영화관·공연장
 - (행사·집회) 접종 여부 관계없이 구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
 - (종교시설)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% 범위 내 실시

□ 추진일정

- 코로나19 총력 대응 : 지속실시
 - ※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, 빈틈없는 방비태세 구축

2

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

주요 시책 추진 및 시정현안 대응에 있어,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소통·협력을 강화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

□ 추진개요

-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증진이라는 공동목표 지향
- 정책방향 공유를 통한 동반자적 인식 및 시의회-집행부 간 신뢰감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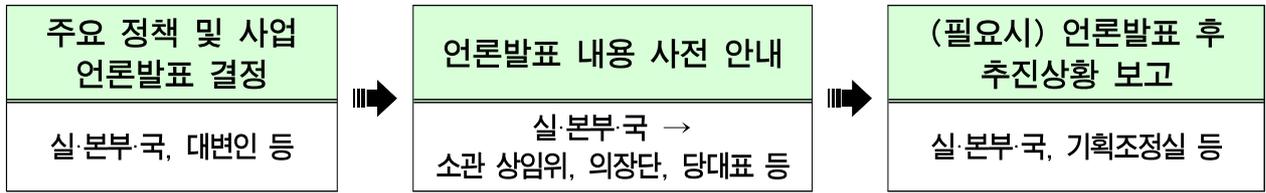
□ 추진실적

1. 주요 현안 공유를 통한 소통 강화

- 의장단·상임위원장단 현안설명회를 통한 **주요 시책과 현안사업 설명 및 협력방안 논의**(’21년 5회, ’22년 1회)
 - 참 석 : 의장, 부의장2, 대표의원, 상임위원장단, 시장단, 관련 실·본부·국장
 - 내 용 : 市 주요 정책·현안 설명, 회기별 시의회 협조 사항 요청
- 교섭단체·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한 **시의원 건의·제안사항 청취 및 시정현안 협의**(’21년 22회, ’22년 2회)
 - 참 석 : 상임위원회별·정당별 시의원, 시장, 정무부시장, 정무수석, 기획조정실장 등
 - 내 용 : 市 주요 정책·현안 설명, 시의원 건의·제안사항 청취 등
- 시의원 개별 면담을 통해 **지역 현장의 의견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**(’21년 11회, ’22년 1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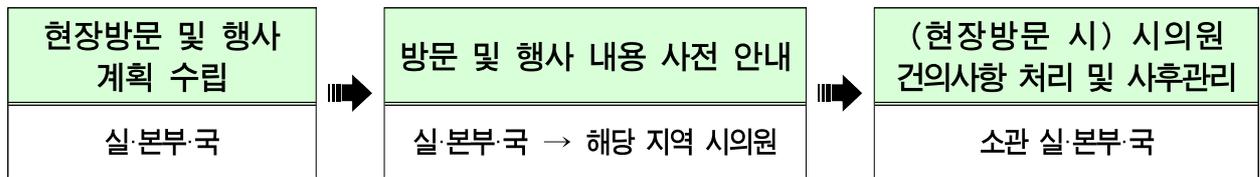
2.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

- **주요 언론 발표자료 사전 설명 및 공유** 철저
 - 상임위 및 시의회 지도부(의장, 부의장2, 운영위원장, 대표의원)에게 소관 실·본부·국장이 사전 설명(방문, 유선 등)하여 사업 취지 및 언론발표 내용 공유



○ 시장 현장방문 및 지역행사 추진시 해당지역 시의원 등에게 방문 목적, 내용 등을 **사전 설명하고 공유하도록 지속적 안내**

- 중요 행사의 경우, 시의회 지도부(의장, 부의장2, 운영위원장, 대표의원)도 함께 초청하고 행사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



3. 의원 지적·건의사항 체계적 관리

○ 매 회기 종료후 ‘시정질문’ 및 ‘5분 자유발언’ 조치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안내 후 **시의회 의정플러스시스템에 게시**

- (’21년) 시의원 79명, 186건 처리, (’22년) 시의원 6명, 7건 처리

○ 간담회 등에서 발생한 건의·제안 사항을 소관부서 지정·전달, 해당 의원님께 **추진경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안내**

추진계획

- 시의회 환경 변화 대응 및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대의회 소통·협력 강화
- 시장 현장방문, 주요행사 일정 등 사전 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
- 시정 전반에 관한 의원 지적·건의사항 체계적 관리 및 피드백 강화

추진일정

-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와 협치 추진 : 연중 계속

3

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 추진

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 현장방문 추진, 자치구와 사안별 소통·협력을 강화하여 시민 정책체감도 제고

□ 추진개요

- 시기별·현안별 민생 현장방문을 위한 일정 기획
- 자치구와 소통·협력을 통한 시정 성과 창출 및 시민 정책체감 제고

□ 추진실적

-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**의료방역 및 민생회복 현장방문 실시**
 - 코로나19전담병원, 집중센터, 생활치료센터, 선별검사소 운영현황 점검 등
 -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어려움 청취

구 분	횟수	주 요 내 용
2021년도	22회	혜민병원(12.27), 인왕시장(11.8), 서울의료원(9.29), 방재센터(9.18) 등
2022년도	8회	미소들병원(1.29), 자가검사키트 검사소(2.2), 소공동지하상가(1.11) 등

- **주요 정책(경제·안전·복지 등) 분야별 민생현장 등 방문 추진**
 - 신통기획 및 모아주택 사업지, 신림경전철 공사현장,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('21년 14회, '22년 7회)
- **市-區간 소통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철저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**
 - 시-구 협력을 위한 구청장협의회와의 소통('21년 12회, '22년 2회)
 - 자치구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장-구청장 면담 실시('21년 12회)

□ 추진일정

- 시의성을 고려한 민생·안전 분야 현장방문 추진 : 연중 계속
- 시책사업 추진 및 현장목소리 수렴을 위한 시-구 소통 활성화 : 연중 계속

4

시의회와 「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」

자치분권 2.0 시대를 맞이하여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시의회와의 상호 협력체계 지원 및 강화

□ 추진개요

-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정부 건의
-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운영 협력체계 강화

□ 추진실적

- 행안부 및 자치분권위원회 등 지방분권 제도개선 촉구 및 대응
 -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사무 비용보전 관련 의견 개진·제출('21.4~10월)
 - 자치조직권 확대 건의 및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촉구('21.5~10월, 4회)
 - 지역경제 활성화,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시도협 공동성명('21.5월)
 - 시도협에 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지방분권 정책공약 제안('21.6월)
 -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및 자치단체 의견제출('21.9월)
 - 지방이양 쟁점, 건의과제 발굴을 위한 서울시-자치분권위원회 영상토론회 개최('21.10월)
 - 행정안전부 개선 및 신설제도 권역별 설명회 참여 3회
 - ▶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('21.12), 시·군·구 특례제도 ('22.1),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방안('22.3)
- 시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기반 마련 및 제도정비 지원
 - 자치분권시대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서울시-시의회 업무협약('21.4월)
 - 시의회 인사팀 신설을 위한 정원조례 개정, 시의회 인사권독립준비팀 (현 인사팀) 신설 및 정원 5명 증원('21.7월)
 -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유사업무 수행인력 산정 통보 관련 시의회 입장과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설명('21.8월, 2회)
 - 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토론 참석('21.11월)

□ 추진계획

-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정부 등 제도개선 촉구 지속 협력
 - 행안부 및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2.0 홍보 지원 및 활성화('22.1월~)
 - 부단체장 증원 등 자치조직권 확대 및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등 지속 건의
 -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보전 및 이양 필요 사무 지속 발굴·건의
- 개정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
 -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제·개정 동향 모니터링, 우리시 부서별 자치법규 및 제도정비 시행
 - 주민조례발안법('22.1.13. 시행), 주민소환법('22.1.6. 행안위 의결, 개정·시행 예정), 주민투표법 등(국회 계류중)
 -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 투명성과 정보공개 신설규정 홍보 지원
 - 지방의회의원 대상 겸직금지 규정 개정사항 홍보 등
 -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심사 강화 및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안내
 -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·방법 등 신설 규정에 대한 홍보 및 지원
-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지원
 -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(정책지원관) 연차별 도입 확대
 - '22년 의원 정수의 1/4(27명), '23년 의원 정수의 1/2(55명) 도입 가능
 -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조직개편 등 제도기반 마련('22.1월~)
 - 정책기획담당관 신설 등 증원 (+11), 정책지원관(6급상당) 증원 (+26)
 - 정책지원관 배치·직무 규정을 위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 추진('22.2~)
 - 시의회와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 및 협력 지속

□ 추진일정

- 자치분권 2.0 홍보 및 시의회와 협력체계 지원·강화 : 연중 계속
- 주민자치주간 행사 및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개최 : '22.10~11월